

고용·생활물가 집중 관리... “내년에도 동반성장”

서민 안정·취약층 지원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는 유아학비 지원 확대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개선 등을 내놨다.

◇유아학비 전액지원 대상 소득 하위 70%로 확대=정부는 유아학비(만 3~5세)의 전액지원 대상도 보육료 지원과 함께 소득 하위 50%에서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는 보육료 지원과 같이 부부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하고 나서 계산한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올해 22만명에서 내년에는 28만명으로 늘어나며 지원 규모는 5153억원에서 6232억원으로 증가한다. 보육료는 국비지원이며 유아학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또 서민회화 3대 핵심과제 등 8

소득하위 70%까지 유아학비 전액지원

대 주요과제에 배정된 내년 예산 32조2천억원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2단계 서민회화 예산을 마련해 2012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지원도 마련했다. 우선 음식점업 등 중소기업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우대와 신용가드 세액공제우대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세제지원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와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생계형 저축 비과세와 세금우대저축저축과세(9%) 등의 일몰을 연장한다.

응도별로 다른 진단서 수수료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일반진단서는 1만~2만원이지만 경찰서용은 5만원, 법원

용은 10만원 등으로 차이가 나는 문제점이 있다.

의료비 정보공개제를 확대하는 등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재창업자금 대출 상환기간 5년으로 연장=사업에 실패하더라도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창업자의 초기자금 예로를 해결, 중소기업진흥공단 재창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실패한 벤처·중소기업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요건을 개선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규 재창업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로 국한된 현행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진수회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왼쪽부터)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내년도 경제운용방향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업을 공개 내실화...대학 구조조정 촉진

인력 수급 불균형 해결

정부는 201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인력부문의 경우 대학구조조정과 기능인력 향상을 통해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학 취업률 공개 내실화=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에 취업률 공개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 재정지원 신청제, 지원액 삭감·환수 등 취업률 하위 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단기(3개월 이내) 고내 취업자를 취업통계에서 제외해 부풀리기를 막기로 했다.

취업 통계 조사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취업 유지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유지취업을 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영부실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해 경영건설팀을 거쳐 통·폐합, 합병, 자진폐산,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등의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 수 감소로 사립학교 법인 해산시 잔여자산을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 법인에 출연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에 현장 산화력이 가능한 '산업단지 캠퍼스'를 6곳 조성하고, 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전문계고, 전문대,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에 14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요자가 훈련 과정을 선택하는 '내일 배움카드제'를 실업자 훈련과정 전체로 확대하고 대상에 비정규직도 포함하기로 했다.

마이스터고와 연계된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계고 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26만3000명의 전문계고 재학생의 학비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금융회사의 전문계고 졸업생 채용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장기재정전망 추진...건전성 확보=정부는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고령화 관련 지출 소요를 2050년까지 전망한 '장기재정전망'을 내년 6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장래 재정 지출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050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우리 경제·재정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다.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종료(2011년말)에 대비해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불필요한 의료인력 축소, 약제비 절감 등이 추진된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 등을 반영해 2007년에 수립한 2008~2015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재수립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자원을 위한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식량·자원공급기반 강화를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를 재설정하고 공·조사료 등의 논 재배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확대하고 대상에 비정규직도 포함하기로 했다.

마이스터고와 연계된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계고 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26만3000명의 전문계고 재학생의 학비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금융회사의 전문계고 졸업생 채용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인력부문의 경우 대학구조조정과 기능인력 향상을 통해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종료(2011년말)에 대비해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불필요한 의료인력 축소, 약제비 절감 등이 추진된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 등을 반영해 2007년에 수립한 2008~2015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재수립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자원을 위한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식량·자원공급기반 강화를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를 재설정하고 공·조사료 등의 논 재배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유통 개선·시장감시 강화

2011년 경제정책방향이 담은 물가정책의 핵심은 유통구조 개선과 시장감시 강화에 있다. 농산물의 경우 수급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에,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가격정보 공개나 모니터링을 통한 경쟁 촉진과 감시 강화에, 부동산시장의 경우 수급 및 가격 안정 노력에 방점이 찍혔다.

◇농산물 도매거래 방식 다양화=경매에 참가·수의매매 추가=우선 농산물 물가와 관련, 계약제에 물량을 늘리고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될 때는 계약제에 면적을 확대하는 예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 급식 재료에 대한 전자조달을 올해 250개

‘지방물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교에서 내년 1000개교로 늘린다.

◇할당관리제품 67개로 확대=지방물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주요 생필품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가격차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한 가격정보 제공 대상도 늘린다.

중앙공공요금의 경우 안정 기조를 이어나가고 지방에 대해서는 ‘지방물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하기로 했다. 상반기 물가 불안요인으로 우려되는 대학등록금에 대해서는 인상 여부 등을 재정 지원을 연계해 등록금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보금자리 주택 21만호 공급=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된다.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보금자리주택을 애초 계획대로 내년에 21만호 공급하고 민간 주택 건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응도지역별 건축물 유형을 시장·군수가 지역 상황에 맞게 추가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조세 투명·기부 활성화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금융거래와 조세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계약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세 투명성 강화=불법 차명거래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제도 도입도 내년 2월에 다시 추진된다.

아울러 고소득자의 역외탈세 방지와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해외금융계좌와 신고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신고부담을 덜기 위해 해외금융자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거

나눔문화 정착 위해 세제지원 강화

주자 또는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6월부터 2010년도분부터 신고하도록 했다.

◇기부 세제지원 강화=사회적기업가 발굴=나눔문화 정착을 위해 기부금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기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법정, 특례, 지정으로 구분된 기부금단체 분류를 법정과 지정으로 단순화하고 대상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세제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세제지원 강화 차원에서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를 개인의 경우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법인은 5%에서 10%로 늘리

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에 청년 사회적기업가 발굴에 112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대상을 넓혀 사업대상자와 고용인력 범위에 가정폭력피해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추가하고 ‘지역사회 공헌형’ 유형도 관련 법령에 신설한다.

하도급대금 직불제의 경우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공사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역공동도급제도 확대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했다. /연합뉴스

내년에 달라지는 서민생활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보육·교육 투자확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대폭 확대(소득하위 50%이하 → 70%이하)	소득하위 70%이하	3월 19,346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 양육수당 지원 확대(0~24개월 → 0~36개월, 10만~102만~202만원/월)	차상위계층 이하	1월 898
전문계고 학생의 교육비 전액지원(수입료·입학금 지원, 1인당 연평균 120만원)	전문계고 재학생 전원	1월 3,159
저소득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1인당 연간 5백만~1천만원 지원)	소득 5분위 이하 대학생 학업성취 우수자	1월 1,000
전문대 우수학생에게 장학금 지급(1인당 연간 평균 520만원)	학업성취 우수자 전문대 신입생	1월 96
취약계층 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인상(4인 가구 기준 월 136.3 → 143.9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월 72,887
탈수급자에게 의료·교육급여를 2년간 지원	탈수급자	1월 74
기초노령연금 확대(375만명, 2.7조원~388만명, 2.8조원)	65세이상 노인(월 소득 70만원 이하)	1월 28,252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도입(17군 중재난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여 병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서비스를 추가 제공)	1급 장애인	10월 777
최저임금 인상(시급 4천 10~4천 320원)	모든 근로자	1월 -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확대(저소득층·청년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 포함)	저소득층, 청년·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 포함	1월 574
차상위계층을 위한 임대료 지원(특별 임대료 3% 추가, 기입기간 6개월~3년)	차상위계층 이하	5월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8~6%)	일용근로자	1월 -
다문화 가족의 국제금융우편(EMS) 발송 요금 인하(15%)	다문화 가족	9월 -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의료복지 강화 출산전료비 지원 확대(30만~40만원)	산모	4월 450
결핵환자 진료비 중 본인 부담분의 50% 지원 및 결핵환자 검출자에 대한 진단비 지원	결핵환자 및 검출자	3월 69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확대(3회까지 150만~180만원, 4회 0~100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1월 199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과다중용 치료제, 당뇨치료제, 항암제 등)	해당 질병 환자들	2011년중 1,325
도시·산간 응급구조차 이용을 위한 선박·헬기내 응급진료비 환급, 119 구급차원행선 신설 등	도시·산간의 응급환자 등	1월 299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서민의 편의증진 신용회복기금 지원 확대(한정대출(한도) 전수취급 확대(한도 6개~16개은행))	신용등급 6등급이하	1월 -
이동통신 요금 지원 확대(이동통신 요금 지원 확대)	불법 시금증 피해자	2011년중 -
상조금, 다단계 판매업, 전자상거래 등 피해다발 분야에 대한 감시 및 정보공개 강화	일반 국민	2011년중 -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농·어민의 애로개선 소상공인을 위한 성공창업 패키지 교육 실시	소상공인	3월 72
영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우대제도(30%수거율제와 일몰연장(2년))	음식·숙박업, 소매업, 중소기업의 영세사업자	1월 -
재향·준재향군인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신청요건 완화(재향금 대출회복 요건 폐지)	재향·준재향군인 중소기업인	하반기 -
농어업인 지원 확대(농어업인 지원 확대)	농어업인	1월 -
농어업인 지원 확대(농어업인 지원 확대)	농어업인	1월 -
농어업인 지원 확대(농어업인 지원 확대)	농어업인	1월 -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농·어업인 지원 확대 농·어업인 지원 확대	농·어업인	1월 -
농·어업인 지원 확대(농·어업인 지원 확대)	농·어업인	1월 -
농·어업인 지원 확대(농·어업인 지원 확대)	농·어업인	1월 -
농·어업인 지원 확대(농·어업인 지원 확대)	농·어업인	1월 -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중·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28-0990, 010-8494-9484

남성 휴대용 **실물과 똑같은 내여자**

[꿈꾸는 공주]

내 여자가 장만에 화제다 얼굴이며 몸매가 모델을 뺀데 거기에다 흔들며 떨어지니 할망 거리는 머릿결 보드랍고 말랑거리는 피부 촉촉이 는 눈동자 가슴과 신체 부위가 실재한데 키는 1m50이 되며 섹시하니 꿈인지 생인지 헷갈린다. 분능적인 성욕을 해소하면 정신 건강에도 유익하고 '성'병의 예방도 되니 내여자가 인기폭발로 불타가 난다.

※ 8만원 상당의 선물과 휴대용 기방도 드립니다.

(식약청 USA 통관제품) 인기폭발 **“양코”**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작수입품입니다. 30대부터 80대까지 지구력이 당당해 지므로 섭취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농협 02302-469931(정의철) 생노병사 불노정생 책을 드립니다

사이텍 070-7786-6631 010-6306-7070 (미쓰고) 070-7786-9710 010-7102-7070

12월 4일

새롭게 OPEN 했습니다!

오실맨 2가실맨 4!

부킹성공 120%

최진희

12월중 출연예정

입장료 무료!!

롯데클라빅

금남전자상가 지하층 롯데백화점 후문쪽

EVENT!

연말연시 모임 단체

가격할인

최신 인테리어 시설완비

최신 인테리어 시설완비
대형틀 완비, 최신시설에 깨끗한 내부 시설 및 인테리어, 모임 단체 환영 최대 100명 수용 가능

노래하는 음악 홀 카라

예약문의 | 010-6727-3966
위치 | 대인동 우체국청사부근